

## ‘4大江 사업’ 贊反단체 현황 및 관리방안

2009. 7. 1

‘4大江 살리기 사업’ 관련 찬성·반대단체 현황을 점검하고, 찬성단체 육성 및 반대단체 견제를 위한 정부차원의 관리방안을 검토하였음

### 贊反단체 현황

#### 【 反對단체 】

##### ○ 환경단체들은

‘운하백지화국민행동’(389개 단체)을 결성, 4大江 반대활동 주도

- 환경운동연합은 ‘4大江 연구단’(교수 등 47명)을 구성, 반대활동 전략을 수립중이며 정부의 ‘4大江 홍보강화’에 맞서 이른바 ‘진실마케팅’ 추진
  - \* 중앙에서 자료·강사를 지원하고 지역조직 책임하에 설명회를 실시, 반대여론 조성 복안
- 녹색연합은 ‘운하백지화국민행동’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勢 확산을 위해 시민단체·종교계·학계 등의 左派인사들과 연대투쟁을 적극 모색
- 환경정의는 환경단체중 운하 관련 전문성이 가장 높아 ‘운하백지화 의 자금관리·반대성명서 작성 등 핵심적 역할을 수행

##### ○ 종교계 左派인사들은 4大江 반대활동을 중단내 입지강화에 활용

- 는 3.28~6.27간 조계사~전국 사찰순례 및 오체투지 행사 등을 통해 불교계 전반에 ‘4大江 사업’ 반대여론 확산 도모

- 는 '환경보존'이라는 천주교 교리를 내세워 '4大江 사업'에 반대하면서 전국 교구별 순회교육 등을 통해 반대여론 조성

\* 는 6.29 '대통령의 대운하 포기 선언은 거짓말'이라고 주장

○ 학계·법조계 左派단체들은 4大江 사업 반대논리 개발 등 측면 지원

- 대운하반대교수모임(2,700여명)은 '4大江 반대 토론회'(08.12)·'4大江 마스터플랜 검토의견 발표'(08.6) 등을 통해 반대여론 확산 기도

- 와 환경소송 전문가인 변호사 주도로 정치권과 연계, '4大江 사업'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제기 등을 검토중

\* 국가재정법상 500億원 이상 국책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데 22兆원 규모인 '4大江 사업'이 同절차를 거치지 않아 違法이라고 주장

○ 등 左派 농민단체들도 하천부지 경작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주장 하면서, 6.27 '4大江 저지 범국민대회' 참여 등 반대활동에 본격 가세

\* 農民운동 주도권 확보 등 목적으로 하천부지 경작민들에게 4大江 사업 저지투쟁을 선동

### 【贊成단체】

○ 등 일부 단체가 있으나, 대부분 新生·群小단체들로 반대단체 대비 영향력·전문성이 취약

- 은 08.12 '4大江 사업' 지지단체로 출범하였으나, 참여단체간 알력으로 초대 대표가 탈퇴하는 등 잡음 표출

- 은 기존 환경단체의 대안 없는 반대를 비판 하면서도 정책연구에만 치중, 반대단체에 대한 직접 대응은 기피

- 는 자전거 등 강변문화 홍보로 '4大江 사업' 지지를 유도할 계획이나, 인력·자금 부족 등으로 성과 불투명

대통령의 운하 포기 선언(6.29) 이후, 4大江 찬성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점을 감안, 반대단체 제압·찬성단체 역량강화를 적극 추진, 사업 가속화

【 반대단체 활동 견제 】

① 환경단체 : '반대를 위한 반대단체'로 인식되도록 여론 조성

- '4大江=대운하' 주장의 허구성과 함께 환경단체의 국책사업·지역개발 저해사례 등을 집중 부각, 반대논리 무력화

\* 경부고속철 천성산 터널 공사의 경우, 녹색연합· 등이 습지훼손을 이유로 극렬 반대, 공사가 1년간 중단되면서 총 2.5兆원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

- '4大江 사업'을 악용하고 있음을 적극 홍보, 활동명분 약화 유도

② 종교계 : 골수 左派와 설득 가능한 인사를 분리 대응

- 의 경우, 4大江 주변 지자체장들이 해당 교구장을 적극 설득, 信者들이 정치 목적의 반대활동을 비판토록 유도

\* 이 左派성향이나, 信者들의 여론에는 민감하게 반응

- 등은 골수 左派단체로 설득이 불가능한 만큼 不法 반대활동에 대한 채증을 강화, 압박

③ 교수모임 : 이념·도덕성 문제 제기로 勢 약화 유도

- 보수언론을 통해 同단체들의 이념적 편향성·특정정파 지원활동 등을 집중 부각, 비난여론 조성

- 4大江 반대 주도 인물( 변호사 등)들에 대한 비리발굴을 통해 활동을 약화시키는 방안 강구

\* 의 경우, 4大江 반대활동을 사실상 변호사에게 일임하고 있어 同名에 대한 세무조사 등 압박시 활동 약화 불가피

④ 의 하천부지 경작민 선동에 대해서는 農民들에게 不法시위에 대해 벌금형 부과는 물론 보상시 불이익 방침을 주지, 반대활동 무력화

\* 農民들은 대부분 경제력이 취약, 체벌보다 벌금형 등 경제적 불이익에 예민하게 반응

### 【 찬성단체 역량 강화 】

① 정부의 사업 추진전략을 충분히 인지하고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'4大江 추진본부' 및 국토·환경부 등과 상시 대화채널 구축

\* 정부차원의 4大江 사업계획·홍보논리 교육을 수시 실시, 취약한 전문성을 보완

② 필요시 '4大江 사업 자문위원' 등으로 위촉하는 등 인정감을 부여, 보수층의 적극적인 참여·활동을 유도

\* 보수인사들은 시장경제주의자들로 對外 과시욕이 강하고, 활동에 대한 반대급부에 민감

③ 정부차원의 홍보활동비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, 등 기존 보수단체들과 연대를 통한 勢 확산 추진

※ 붙임 : '4大江 사업' 贊反단체 및 주도인물 현황

※ 배 포 : 홍보기획관

<붙임>

## ‘4大江 사업’ 贊反단체 및 주도인물 현황

### 【 反對단체 】

단체명	세력 및 반대활동 내용	
환경운동연합 (93.4 설립)	기본현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대표 :</li> <li>○ 사무총장 :</li> <li>○ 회원수 : 8萬 5,000여명</li> <li>○ 조직 : 중앙사무처와 52개 지역조직·전문기구(등)로 구성</li> </ul>
	활동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과 함께 3~4월간 ‘4大江 현장조사’를 실시하고, 6.1 ‘4大江 사업은 대규모 토목사업’이라는 취지로 기자회견</li> <li>○ ‘4大江 마스터플랜 발표’를 계기로 6.9부터 에서 반대농성 돌입, 4大江 반대활동에 본격 착수</li> <li>○ 최대 환경운동단체로서의 위상 회복을 위해 6.27 ‘4大江 저지 범국민대회’ 개최를 주도</li> </ul>
녹색연합 (91.4 설립)	기본현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대표 : 등 6명</li> <li>○ 사무처장 :</li> <li>○ 회원수 : 1萬 5,000여명</li> <li>○ 조직 : 중앙 및 8개 지역조직과 전문기구(등)로 구성</li> </ul>
	활동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08.12 사업 중단요구 기자회견을 통해 ‘4大江 사업의 문제점 발표’ 등 반대활동을 선도</li> <li>○ 환경정의와 함께 결성을 주도</li> <li>○ 토론방 등 左派 매체를 통해 정부사업 비판 및 4大江 반대여론 확산 기도</li> </ul>

단체명	세력 및 반대활동 내용	
환경정의 (92.11 설립)	기본현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대표 : [redacted] 등 5명</li> <li>○ 이사장 :</li> <li>○ 사무처장 : [redacted]</li> <li>○ 회원수 : 4,000여명</li> <li>○ 조직 : 지역조직</li> </ul>
	활동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[redacted] 운영 등 水質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점을 내세워 '4大江 사업' 반대활동을 주도</li> <li>○ '4大江 사업 마스터플랜'이 발표된 이후, 반대성명을 지속 발표하면서 對정부 공세를 강화</li> </ul>

단체명	세력 및 반대활동 내용
-----	--------------

【 贊成단체 】

단체명	세력 및 반대활동 내용
-----	--------------



## ‘4大江 사업’ 主要 반대인물 및 관리방안

2009. 7. 16

‘4大江 사업’ 반대를 주도하고 있는 사회·환경·종교단체 등의 주요인물 20명에 대한 ‘전담관’ 매칭 등 관리방안을 검토했음

□ 사회단체 : 주요 반대인물은

등 3명

- 끝수 左派 인물들로서 反정부 활동을 통한 左派 세력 기반 확산을 목적으로 4大江 사업 반대에 집중
- 친분인사 등으로 간접 관리라인을 구축하여 투쟁계획 등을 사전 파악하고, 從北 좌파 활동·국익 저해시례를 공개하여 국민적 거부감 조성

< 사회단체 >

관리대상 인물	친분인사	관리대상 인물	친분인사
---------	------	---------	------

□ 환경단체 :

등 4명

- 의 결성을 주도하였으며 4大江 사업 반대활동의 求心點 역할 수행
- 환경부에서 운영중인 ‘대외협력 담당체계’를 중심으로 전담관을 지정하여 관리하고, 단체간 갈등 및 주도권 다툼 등 취약점을 집중 공략, 연대 차단·반대활동 無力化

< 환경단체 >

관리대상 인물	전담관	관리대상 인물	전담관
---------	-----	---------	-----

□ 종교단체 : 상임대표 ·  
집행위원장 · 주지 등 4명

- 종교적 신념을 내세우고 있으나 4大江 사업 반대활동을 종단내 입지강화 및 개인적 명망 획득 등에 활용
- △온건파인 스님은 친분인사 등을 통해 순화, 신부는 가톨릭 신자 등을 통해 간접 압박 등 맞춤형 관리
- 주지 · 상임대표의 경우 접촉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, 과거 국책사업 · 지역개발 저해사례 등을 부각시켜 勢 확산을 차단하고 불법 행동에 대한 채증 강화 등으로 압박

< 종교단체 >

관리대상 인물	친분인사	관리대상 인물	친분인사
---------	------	---------	------

□ 지역환경단체 : 회장 ·  
공동대표 · 사무처장 등 6명

- 운영자금 부족 등으로 투쟁동력은 다소 약하나 상급단체인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의 지침에 따라 지역민심 선동 등 지속
- 각 지역환경청 및 지자체에서 관리하되 생계곤란 등 개인적 애로사항 및 활동자금 확보과정에서의 비리 등을 적출하여 반대활동 견제

< 지역환경단체 >

관리대상 인물	전담관	관리대상 인물	전담관
---------	-----	---------	-----

□ 기자·교수 : | | 기자· | 심의위원· |  
공동대표 등 3명

- 4大江 살리기 사업관련 생태계 파괴·泐 설치에 따른 수질악화 문제 제기 등 반대 논리를 생산하고 여론·쟁점화
- 업무상 공식 접촉을 통한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친분인사 등을 통해 순화·조정하고 왜곡·편파보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청구·언론중재위 제소 등 공세적으로 제어

< 기자·교수 >

관리대상 인물	친분인사	관리대상 인물	친분인사
---------	------	---------	------

※ 붙임 : 4대강 사업 주요 反對인물 활동동향 및 관리방안

※ 배포 :

< 붙임 >

‘4大江 사업’ 주요 反對인물 활동동향 및 관리방안

【 사회단체 】

【 환경단체 】



【 종교단체 】

【 지역환경단체 】





【 교수·기자 】